

청년조례 만든 광주, 청년정책은 아직 걸음마

전국 첫 제정 불구 실질적 도움주는 정책 미비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청년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의 미래가 지역의 미래임을 천명한 민선6기 광주광역시의회 출범은 의욕에 넘쳤다.

그러나 반환점을 넘긴 지금 광주의 청년들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지금 아무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본보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 광주광역시에 청년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청년들은 응답자의 11.3%에 불과했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나 됐다.

지난해 12월 28일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안의 골자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1조 목적)

핵심조항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제안, 문제발굴 및 조사, 개선 방안 모색, 국내·외 청년단체와의 교류 등을 촉진하는 것 등이 있다.

이 외 나머지 항목에서는 청년의 시정참

여를 독려하며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안정, 창업지원 조성, 기본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및 권리 보호 등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력한다', '대책을 강구한다'라는 어미로 끝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는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조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 중 가시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은 청년센터의 설립과 청년위원회의 활동 뿐이다. 청년센터는 'the 숲'이라는 이름으로 급급로 지하상가에 터를 잡았다.

하지만 청년정책을 관리, 담당하는 정책위원회는 지지부진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 조례가 제정이 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최근에서야 청년정책위원회장

이 선출되는 등 아직까지도 기지개를 켜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다 이해야 뜻을 올린 격이며 조례 제정 이후 정책적인 부분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한 시의 안일한 태도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다.

현재 광주시의 청년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특색 없고, 조례의 제정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이며, 청년관련 예산마저도 본예산의 0.7%에 불과하다. 관련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실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광주지역 모든 청년들의 바람일 것이다.

<이영주 학생기자>

“청년 권리는 참여하는 자의 것 내년부턴 직접지원 늘리겠다”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 이정석 과장



“광주광역시에서 ‘청년정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민선 6기의 출범과 동시에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다. ‘청년의 미래가 광주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해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광주 청년들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관심분야가 가장 높았던 것은 일자리, 고용 분야로 47.7%로 1위를 차지했다.

“역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렇다. 조사결과 우선순위에 일자리 창출 및 확대가 45.3%로 가장 높았다. 일자리 창출을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3대 먹거리 산업기반 확충에 모든 시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을 시 각종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 참여는 청년들의 참여권리 보장차원에서 시행했다. 청년들의 권리에는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이 다양하게 포함돼 이를 위해 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10% 이상 보장하는 청년 할당제를 올 초에 도입했다. 청년이 행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이다. 특히 청년들과 함께 시정을 운영해 간다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대내외적으로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평이 있다.

“올해 광주가 펼친 청년정책 중 잘 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년 네트워크에 중점을 뒀다. 청년과 청년, 청년과 행정, 청년과 기업, 청년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졌다. 또 잘된 게 있다면 향후 5년 동안 청년정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준이 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다. 책자로 나와 광장히 부듯하다. 또

앞서 말한 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10%보장하는 청년할당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있다.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는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 즉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NEET 청년과 같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에 관심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미흡했다. 이점은 실태조사를 한 후 정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내년 광주시의 청년정책 주안점은 무엇인지

지난 2년의 성과를 토대로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앞서 말한대로 참여하는 청년, 활력있는 청년이 중심이 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내년에는 외부활동조차 위축되고 차단된 취약계층 청년들을 찾아가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청년들을 위한 지원연계체계를 더욱 강화해 갈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권리를 찾는 방법은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청년당사자 조직인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하고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청년센터를 개관하였고 청년들로만 구성된 청년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지역 청년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구동환 학생기자>



광주광역시는 전국 처음으로 청년조례를 제정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나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 성과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 프린지페스티벌 모습. <광주일보 제공>

광주청년조례 발의한 김동찬 시의원

“포퓰리즘 유혹 버리고 도움되는 정책 만들어야”

“청년정책기본조례, 발의 동기가 궁금합니다.

“청년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해 실패했을 경우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부채가 걸리는 국가의 집이 됩니다. 청년 정책은 지원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다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몇 푼의 지원을 통해서 이뤄지는 특혜는 접근방식이 잘 못 됐다 생각합니다.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정책보다 깊고 포괄적인 상태에 접근해야 합니다. 청년의 사회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청년의 정책 개발에 청년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게끔 독려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냈습니다.”

“광주청년조례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민선 6기에 들어 가장 먼저 선포한 정책이 청년 정책입니다. 하지만 법규와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계획이 구체화 됐는데 첫 번째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지원육성효과가 신선했는데 단순히 신선했을 뿐 아니라 구제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될 수 있다는 데에 두 번째 의미를, 그러한 정책들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세 번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부채경감, 이자 지원제도 등 비실업적인 측면에서도 조례를 통해 다가가기와 노력하며 청년 문제를 본질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전반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만들어 내며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 중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을 짚는다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광주시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청년 센터’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혹은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책이라던지 청년들의 사회참여, 고민, 취업, 창업 등 전반적인 고민 나눔의 장이자 아이디어뱅크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낼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시킬 위원회로서 청년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회, 시 관계자, 교수 등 다양한 집단이 5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례를 따라 신설했습니다.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을 같이 고민하며 하나의 테이블 아래 청년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싱크 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닌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실적을 구체화 해 5년 단위로 시장이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조례의 효력이 여전할 것입니다”

“아직은 광주의 청년들이 조례의 효과를 못 느끼고 있는데.

“조례제정 1년인데 아직은 예산대비 효과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도적 입장에서 조례의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4~5년이 지나면 궤도에 올라 정착 될 것으로 보이며 10년이 지나면 완성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례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끝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광주시의 청년들이 만족할 만 한 조례 아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 거론해볼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주거해택에 관한 정책으로서 주택 전용 월세 대출의 이자 지원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실제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측에 바라는 점은?”

“집행부에서는 정책을 포퓰리즘, 인기 및 영합주의나 형식적인 정책에서 탈피하길 바랍니다. 경제적 인프라 구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하지 말고 청년들의 피부에 확실히 와 닿을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에서 산업 3대 정책으로 꼽는 에너지, 자동차, 문화산업 중 자동차 산업에 좀 더 구체화시키고 바라고 한편으로 대표되는 공기업의 지역청년고용할당제 등의 정책을 만들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두되길 바랍니다.”

<이영주 학생기자>

청년 노동의식 강조하는 김양현 광주지방노동청장

“직업훈련 강화·고용보조금 확대 계속할 것”

“현재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률이나 또 취업현황은 어떤가요?

“광주시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봤을 때 전국 평균으로 치면 10명중 4명 이상이 취업하고 있다면 광주의 경우에는 평균이 못 미치는 3.75명이 취업하는 추세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도 되지 않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 50%보다 10%가까이 높습니다.”

“광주지역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정부에서도 해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2조정도의 예산을 투입 하는 동시에 50여 가지의 정책이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썩 나아지지는 않다는 의미에선 통감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크게 대 여섯 가지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지도 훈련, 일자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보다 인턴 등 경험을 우선적으로 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선택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지만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분들을 위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 기업체에 특고고용 등을 고용하게 되면 주는 보조금이 있으며 사업장들의 정보를 기록화해서 구직자들과 사업장을 알선시켜주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정책과 프로그램들로 취업에 성공하거나 또 효과를 거둔 사례들도 많나요?”

“물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들 중 60~70%는 취업을 합니다. 다만 근로지속기간이



나 근로조건, 임금 등이 만족할 수준이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금 년 만해도 청년인턴제도에 598명이 들어와 있고 청년취업패키지에 1796명이 들어와 있는 등 이 인턴들 100%가 아니라도 60~70%의 인턴들은 취업을 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그런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꼭 받아오던 25세의 장애인 청년이 있었는데 장애인고용의 훈련 후 취업을 한 경우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여러 취업지원정책이 있지만 한편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는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많은 청년 취업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성공한 정책도 있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책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첫째로 정부 프로그램이 너무 획일적이었다. 혹은 배후적으로 너무 나열돼있고 결국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 아니라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치려고 노력중이지만 정부정책이란 것이 변화를 급격히 주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본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고쳐볼 예정입니다. 그간 참여기간을 8개월로 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후엔 필요하다면 짧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직업 훈련 같은 경우엔 경직되고 일관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 왔던 지난 과정의 벽을 허물고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이틀테면 수강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대학 현실살상이 실습비 체불로 갈등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가슴아픈 일입니다. 교육과 훈련에 중점 두어야 마땅한데 학생들을 단순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왕왕 뉴스에 보도되며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을 체험하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이러한 사건들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해보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금년 2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로시간 규정 아래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사업주가 임의로 수련내용을 바꾼다면, 위험현장에서 사전교육 없이 투입시킴을 방지시키는 내용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측에서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학생 본인이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조:KCTV 광주방송 <이영주 학생기자>